

무인 로봇차 200대 달린다... 자율주행 성지도약

모두의 시 광주

운전자 없이 인공지능(AI) 기술만 적용된 차량이 광주 도심에 달린다. 대한민국의 미래 자율주행 기술을 실험할 무대로 선택된 광주는 실증 결과에 따라 세계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 도시로 도약하게 된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미래차 모빌리티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광주를 지정했다. 9일 차량 모델 선정에 시작으로 20일께 협약, 5월 시범 운행을 거쳐 9월에는 광주 도심 곳곳에서 자율주행차량(로봇차량) 200대가 실제 주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광주 전역을 미래차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할 바 있다. 또 도로 환경이 복잡한 도심에서 레벨4 수준의 로봇차량이 주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레벨4는 운전자 개입 없이 인공지능 시스템이 모든 운전을 수행하는 단계로, 예산 622억 원과 로봇 차량 200대가 투입된다.

성공 여부에 따라 2027년 인공지능 기반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가 추진되며, 광주는 실주행 데이터를 표준화해 공유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된다.

광주 도심에서의 로봇 차량 실증 주행은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다음 달 도·농 복합 도시인 광산구와 북구·서구 일부 지역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 로봇차량 9대를 우선 투입해 기술을 점검한다. 안전관리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비교적 차량이 적은 농촌 지역과 도심 도로를 달리며 기본 데이터를 확보한다.

2단계에서는 운전자 없는 실증 주행이 시작된다. 인공지능 원격 제어 기술을 점검하는 단계로, 안전관리 요원이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주행 범위도 확대된다.



미래차 모빌리티 자율주행 실증도시 광주.

사진=광주시청제공

4월부터 3단계 실증...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청신호 복잡한 도심 변수 데이터화, 'K-자율주행' 관계 플랫폼 구축 규제 혁신·친환경 모빌리티 결합... 미래차 산업 생태계 완성

상용화 여부를 검증하는 3단계부터는 운전자 없는 로봇 차량 200대가 광주 도심 곳곳을 누비며 자율주행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도로 환경 데이터를 수집한다. 도심 출퇴근 정체, 눈·빗길, 공사 구간, 단거리 이동, 차로 축소, 교통사고, 골목길 등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수집해 미래차 모빌리티 기술에 적용한다.

동시에 로봇 차량을 관제할 플랫폼이 구축되고, 창업 기업 등에 자율주행 차량 소프트웨어(SW)를 제공하는 'K-자율주행 협력 모델 구축 사업'도 추진된다. 또한 '선(先)허용 후(後)규제'를 원칙으로 필요한 부분만 규제를 남기고, 자율주행 관계·대여·중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도화해 산업 생태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광주에서 확보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미래차 모빌리티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계획이다.

자율주행의 성공은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차 중 친환경차 비율을 40%, 2035년까지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를 인증제를 본격 시행하고 구형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개선 장치 개발에 나선다.

아울러 배터리 리스·교환 실증 사업을 제도화하고, 내년에는 수소 열차 실증,

2029년에는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착공 등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미래 모빌리티에 활용될 3D 고정밀 공간 정보 구축을 돕고, 로봇 및 모빌리티 친화적 건축을 위한 '스마트+빌딩'을 올해 제정해 도시와 교통의 유기적 결합을 도모할 방침이다.

순두염 인공지능산업실장은 "광주가 자율주행 산업 실증 도시로 선정된 배경에는 국가 AI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실증용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등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중국 우한처럼 도시 전체가 자율주행 실증 장소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확보된 기술력은 미래차 모빌리티를 계획하고 있는 전 세계 기업에 제공될 것이며, 무인 배송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영길 기자

전남 농수산물 1월 수출액 7천641만 달러

지난해보다 39% 증가... 김·음료 등 수산물 호조
해외관측 강화·수출기업 맞춤 지원 등 지속키로

전라남도는 올해 1월 농수산물 수출액이 7천641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5천495만 달러)보다 39.0%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수산물이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수산물 수출은 4천653만 달러로 31.4% 증가하며 전체 농수산물 수출의 60.9%를 차지했다.

특히 김 수출이 3천573만 달러로 28.9% 늘어 전체 농수산물 수출의 46.8%를 차지했다. 한류 콘텐츠 확산과 케이(K)-푸드 인지도 상승에 따른 해외 수요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농산가공품 수출도 증가세를 보였다. 농산가공품은 1천954만 달러로 101.8% 늘었으며, 이 가운데 음료 수출은 819만 달러로 124.5% 급증했다. 분유(64.7%), 미역(94.9%), 배(108.4%), 면류(258.6%), 버섯류(842.8%) 등도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2천360만 달러로 140.0% 증가했고, 일본은 1천634만 달러(24.6%), 미국은 1천449만 달러(16.4%), 러시아는 397만 달러(29.1%)로 각각 늘었다. 유럽시장도 확대됐다. 네덜란드(383.9%), 독일

(382.3%), 스페인(3,193.7%) 등에서 김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었다.

전남도는 올해 농수산물 수출의 해외 관측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을 위해 107억 원을 투입한다. 지역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을 비롯해 수출 컨테이너 내륙 운임, 수출 기자재 지원, 국제식품 박람회 참가,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전남 AI 무역센터를 활용한 수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아마존·위(Weee) 등 해외 온라인몰 입점 지원을 확대한다. 13개국 29개소 해외 상설판매장을 내실화해 농수산물 수출을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케이-전남김 등 수출 유망 전략품목을 발굴해 세계 일류 상품화를 지원한다.

신원근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한류 확산과 글로벌 케이-푸드 열풍으로 김과 음료 등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수출이 증가했다"며 "주력시장은 물론 유럽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 성장세를 잇겠다"고 말했다.

/임재일 기자

전남대, 고용부 취업지원사업 선정... 5년간 '80억원' 투입

전남대학교는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 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선정돼 향후 5년간 8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 진로·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전남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대학 내 취업지원 기능을 통합·연계해 학생들이 진로상담, 취업 프로그램, 청년고용정책 연계, 채용정보 제공 등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학생의 상황과 준비에 맞는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진로 단계와 취업 준비 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프로그램과 지원 자원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학생의 진로·취업 준비 수준을 학년과 준비도에 따라 단계화해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저학년 대상 빌드업(Build-up) 단계에서는 자기 이해와 강점 진단을 기반으로

진로 방향 설정과 경력개발 로드맵 수립을 지원한다. 고학년 대상 점프업(Jump-up) 단계에서는 개인별 취업 계획 수립과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취업 준비 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계획 이행 실적에 따라 포인트(수당)를 지급하는 방식도 운영한다.

졸업 이후 학교 지원 체계에서 이탈하기 쉬운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미취업 기간, 준비 수준, 경력 공백, 희망 직무 적합도 등 개인별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박찬진 전남대 진로취업본부장은 "재학생과 졸업생을 아우르는 통합 고용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향후 5년 간 안정적인 예산을 바탕으로 재학, 졸업, 취업 과정에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우인 기자

전라남도는 가공·유통·수출·바이오표 연계한 수산식품산업 혁신을 위해 올해 52개 사업에 893억 원을 투입하고, 수출·바이오 등 중장기 계속사업을 포함해 총 1천52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특히 가공부터 유통, 수출, 바이오까지 수산식품산업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수출과 미래 산업으로 확장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산가공 분야는 539억 원을 들여 가공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수산식품 가공설비 개선과 시설 현대화에 179억 원, 마른김 가공공장 시설 개선과 수급 구조 안정을 위한 김 건조기 교체에 100억 원을 지

전남도, 올해 수산식품산업 혁신에 1천52억원

가공·유통·수출·바이오 연계로 구조 고도화·경쟁력 강화

원한다. 또한 위생·안전 설비 확충 49억 원, 산지가공시설 설비과 위생시설 개선 127억 원, 에너지 절감형 가공설비 도입 16억 원 등을 통해 품질 경쟁력과 생산 효율을 함께 높일 계획이다.

유통·물류 분야는 226억 원을 들여 산지 중심의 유통 기반을 확충한다. 마른김 산지저점유통센터(FPC) 구축 45억 원, 호남권 소비지 분산물류센터(FDC) 조성 60억 원, 수산물 대형·중형 저온저장시설 확

충 99억 원, 노후 수산시장과 위관장 시설 개선 14억 원을 통해 안정적 수급 관리와 유통 효율성 제고를 도모한다.

수산식품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수출·바이오·문화를 아우르는 복합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는다.

국제마른김거래소와 연구개발(R&D) 시설, 냉동·물류창고, 가공공장 등을 갖춘 수산식품 수출단지는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올해 하반기 준공 이후에는 수

산식품 수출 거점으로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해조류를 활용한 바이오 활성소재 생산 시설과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팩토리 조성을 통해 수산식품산업을 바이오·미래산업으로 확장하고, 천일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동화·위생·저장 인프라 확충 108억 원, 창업·기업 육성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20억 원 등을 투입한다.

손영근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전남 수산식품산업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미래 산업으로 자리잡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종팔 기자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